

5.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행정국장)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 상정일자 :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2022년 11월 23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대영)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와 변경된 용어 등의 반영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1회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음.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대상에 달성군 지역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차등 규정을 타 지역과 동일하게 5천만원 이하로 개선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제출 규정을 신설함.
-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시설은 해당 법령에 따라 배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정비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정미정)

○ 이 개정조례안은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 사용 용어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을 상위 법에 맞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였음.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현 행)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의 취득·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

- ▶ 안 제4조제5항에서는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4)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마련하였음.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 임기(안 제4조제5항)

(현 행)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 정)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을 법 제16조제2항5)에 따라 보완하여 안정적인 심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개정 내용(안 제5조제1항)

(제2호)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신설)

(제6호) 법 제24조, 제34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추가)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개정)

- ▶ 안 제5조제2항제3호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취득·처분 재산 기준가격을 달성군 지역(2천만원 이하)만 다른 지역(5천만원 이하)과 달리 정하고 있는 현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하려는 것으로, 기존 내용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군 소재지 관련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없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취득·처분 재산 기준가격

: 타 지역 5천만원 이하, 달성군 지역 2천만원 이하 → 모든 지역 5천만원 이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 **안 제12조**에서는 법 제10조6)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고 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하였음.

대구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행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이어나가야 하겠음.

- ▶ **안 제12조의2제4항**에서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공유재산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이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어 각 지자체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현 시행령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음.

-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공유재산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시행령 제7조제1항)

(현 행)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개 정 / 2023년 1월 1일 시행)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 안 제16조제1항 및 안 제19조 등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 「국유재산법」 등 다른 규정과의 용어 사용을 통일하고 수익에 대한 포괄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 안 별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의무시설 배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지방청사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시설 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관련 근거를 명시한 것임.

- ▶ 그 밖의 안 제3조 ~ 안 제8조 등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 ▶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용어 변경(‘사용·수익 허가’ ⇒ ‘사용허가’)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 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고 조례 내용 전반을 보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 및 조례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 다만, 대구시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중기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자체기준 마련 등 공유재산 제도 운영에 일부 변화가 있는 만큼 관리 효율화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취득·처분 재산 기준가격이 달성군만 달리 정해져 있다가 이번에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데 불합리한 규정을 너무 장기간 방치해 온 것은 아닌지?	○ 기존 규정은 2006년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계속 운영해오다가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음.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배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현재는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건지?	○ 현재는 공무원을 위한 휴게시설로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소 근로자는 일반 공무원이랑 근무 형태가 다른 만큼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임.

5. 토론 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